

2018 비판사회학대회 “신자유주의 극복과 포용을 위한 사회적 모델”
기획세션5 <대안> 포스트 자본주의 시대의 포용적 사회경제모델 탐색
2018년 10월 27일(토) 13:50-15:50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탈자본주의 기본소득론의 입장에서 기술유토피아주의와 러다
이트 좌파에 대한 비판: 탈노동사회(post-work society)와 탈
자본주의(Postcapitalism)의 구분을 중심으로”에 관한 토론문

이건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먼저 제가 좋아하는 금민 선생님의 발표원고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본 발표문은 탈자본주의 기본소득론의 입장에서 “디지털자본주의의 기술적 과정이 탈자본주의로 이어진다는” 제러미 리프킨 식의 기술유토피아주의, 그리고 노동의 양과 질 면에서 파괴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술 진보 자체를 반대하는 러다이트 좌파를 함께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자는 언뜻 상반된 입장으로 보이지만, 디지털전환, 디지털자본주의, 플랫폼자본주의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우리 사회의 변화가 소유 구조, 노동 및 생산 과정의 조직, 분배, 생산 및 재생산 등의 면에서 서로 다른 계급·계층별, 자본 분파별, 산업별로 어떠한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세력의 이해관계는 무엇이며 이를 정치경제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진보적으로 전유하기 위한 정치경제학적 대안과 개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으며 공백(blank)으로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저는 발표자께서 이 글에서 제시한 몇 가지 예비적인 관점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2.

다만 몇 가지 지점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용어 정의의 문제입니다. 탈노동사회, 탈자본주의, 노동력의 탈상품화 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 영위에 충분한 액수의 기본소득, 즉 완전기본소득(full basic income)이 지급되는 사회에서 한 개인이 임노동을 하기로 선택한 것과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한 개인이 임노동을 하기로 선택한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임노동의 선택이 생계유지로 인해 강제되는 바가 없는 사회, 그것을 탈노동사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노동 자체가 양적으로 크게 축소되는 사회를 탈노동사회로 볼 것인지, 그도 아니면 임노동 자체가 사라지는 사회를 탈노동사회로 볼 것인지 등의 입장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 발표자께서는 두 번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화폐론적 가치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생산적 노동

의 축소나 탈노동은 순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가치기반의 소멸을 뜻하지 않으며 곧바로 탈자본주의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본문의 서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노동사회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소개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오해의 여지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탈자본주의라는 개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본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의 문제는 이미 이른바 현실 사회주의(really existing socialism 또는 actually existing socialism) 국가들의 사회 성격을 규정하는 논쟁에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탈자본주의를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기준, 즉 “노동력의 탈상품화, 생산과 재생산 과정 전체에 걸친 사회 인프라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유(common ownership), 발권력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통제와 화폐주조차익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전유”에 의해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탈노동” 또는 “탈노동사회”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탈상품화” 개념에 대해서도 에스핑-안데르센, 가이 스탠딩 등 논자마다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자께서 말씀하고 계신 “노동력의 탈상품화”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 소유 기업과 같은, 생산 및 노동 과정에서의 직접생산자 또는 노동자의 소유, 관리, 운영, 통제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탈자본주의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생산과 재생산 과정 전체에 걸친 사회 인프라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유(common ownership)”의 제시는 매우 중요한 기여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기여를 좀 더 명확히 드러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발권력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통제와 화폐주조차익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전유”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 역시 발표자의 중요한 통찰이자 기여라고 판단되는데, 하지만 이를 ‘자본주의/탈자본주의’를 구분하는 중요 기준으로 제시한 맥락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는 발표자께서 화폐 및 통화제도 역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사회제도, 사회인프라로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발표자께서 ‘화폐론적 가치론’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짐작됩니다.

요약하자면, 기존 논자들과의 비교 속에서 탈노동 및 탈노동사회, 자본주의/탈자본주의, 노동력의 탈상품화 등을 발표자께서 어떻게 개념 규정하고 있는지 분명히 드

러내면서, 발표자의 독자적인 기여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총자본가, 대체임금, 범주적 임금노동화 등에 관한 것입니다. 발표자에게서는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일반지성은 총자본가의 역할을 수행하며 여기에서 기본소득은 디지털 활동에 대한 일종의 범주적 임금노동화, 일종의 대체임금으로 기능한다. 일반지성의 자본주의는 가능하며 생산뿐만 아니라 재생산 영역 전체를 지배하는 자본주의는 목전에 와 있다”라고 쓰고 계십니다. 또한 “플랫폼 자본주의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은 디지털 활동에 대한 대체임금의 도입이자 일종의 총자본가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서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다음의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째,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은 어느 정도 필연적이라고 전망하는 것인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심각한 계급사회, 이종사회로 갈 위험성은 없는가? 야만의 시대, 일종의 노예제로의 후퇴로 갈 위험성은 없는가? 둘째, 기본소득이 “디지털 활동에 대한 일종의 범주적 임금노동화, 일종의 대체임금으로 기능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플랫폼 자본주의 하에서 기본소득이 마이크로페이먼트와 차이나는 지점은 그것의 실현가능성과 비교우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셋째,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된다고 할 때 이를 추동하는 주도세력은 플랫폼 자본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인가? 아니면 플랫폼 자본을 비롯한 다양한 자본 분파들이 함께 추진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본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국가 또는 초국가기구인가? 그렇다면 기본소득이 플랫폼 자본주의를 유지·재생산하는 방식으로 머무르지 않고 탈자본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주체세력으로 프레카리아트의 역할을 자리매김하는 것인가?

3.

마지막으로 “이행”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을 상상해보면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기본소득은 아직 요원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많은 주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니 특히나 생산, 재생산, 노동 등 여러 면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더욱 더 “이행”의 문제가 중요

하며 이 주제에 대한 천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상황’에서부터 ‘플랫폼 자본주의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으로의 이행, 예를 들면 조세형 모델로의 이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또한 ‘플랫폼 자본주의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자본 분파 사이에서의 균열과 갈등을 ‘탈자본주의를 추동하기 위한 기본소득 도입으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지점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아니면 ‘플랫폼 자본주의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으로의 이행을 거친 후 ‘탈자본주의를 추동하기 위한 기본소득 도입’으로 이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처음부터 ‘탈자본주의를 추동하기 위한 기본소득 도입’으로의 이행 전략을 명시적으로 추구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자동화 과정, “이행”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노동조건 등이 열악해질 수 있는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기본소득 이외의 다른 사회정책적 개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제 토론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글은 2018년 10월 27일 2018 비판사회학대회 <세션5. (대안) 포스트 자본주의 시대의 포용적 사회경제모델 탐색>에서 “탈자본주의 기본소득론의 입장에서 기술유토피아주의와 러다이트 좌파에 대한 비판: 탈노동사회(post-work society)와 탈자본주의(Postcapitalism)의 구분을 중심으로”에 관한 토론문입니다. 본 글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